

민주당 정무위, 국가보훈부 및 개인정보위 당정간담 정기국회 민생법안 조속 추진 의지

- 민주당 정무위원회는 11.13.(목) 09:00에 국가보훈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당정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민생법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- 권오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보훈부와의 간담에선 우선, 보훈병원이 없어 그동안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강원도와 제주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준보훈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의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.
- 준보훈병원 확대는 현재 서울, 부산, 대구 등 6개 대도시에만 있는 보훈병원의 역할을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의료기관(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) 1개소를 선정하여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다.
- 준보훈병원 제도가 시행되면 9만여명의 강원·제주지역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비급여 및 약제비를 지원되며, 내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이 운영되어 17억여원의 의료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.
- 또한, 당정은 「제대군인법」을 개정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 복무기간을 공공부문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당정이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.

- 송경희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당정 간담에서는 인공지능(AI) 혁신 지원을 위한 「개인정보보호법」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.
-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, 자율주행 사고 예방 등 공익,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화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기술 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이다. 당정은 필수불가결한 개인정보 활용 조치에 있어서도, 안전이 최우선돼야함에 의견을 같이했다.
-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는 국가보훈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각각 독립/호국/민주의 영역에서 헌신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안과 해킹, 유출 등 침해 행위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협의하고 정책화하기로 하였다.

2025. 11. 13.(목)

정무위원회

강준현(정조위원장), 김남근, 김승원, 김용만, 김현정, 민병덕, 박범계,
박상혁, 박찬대, 유동수, 이강일, 이인영, 이정문, 허영 의원